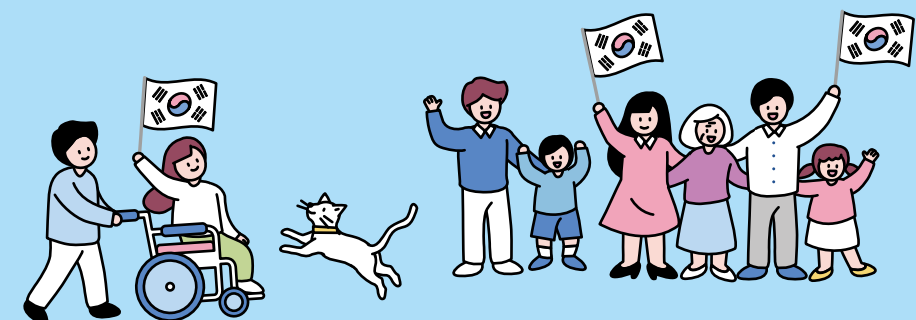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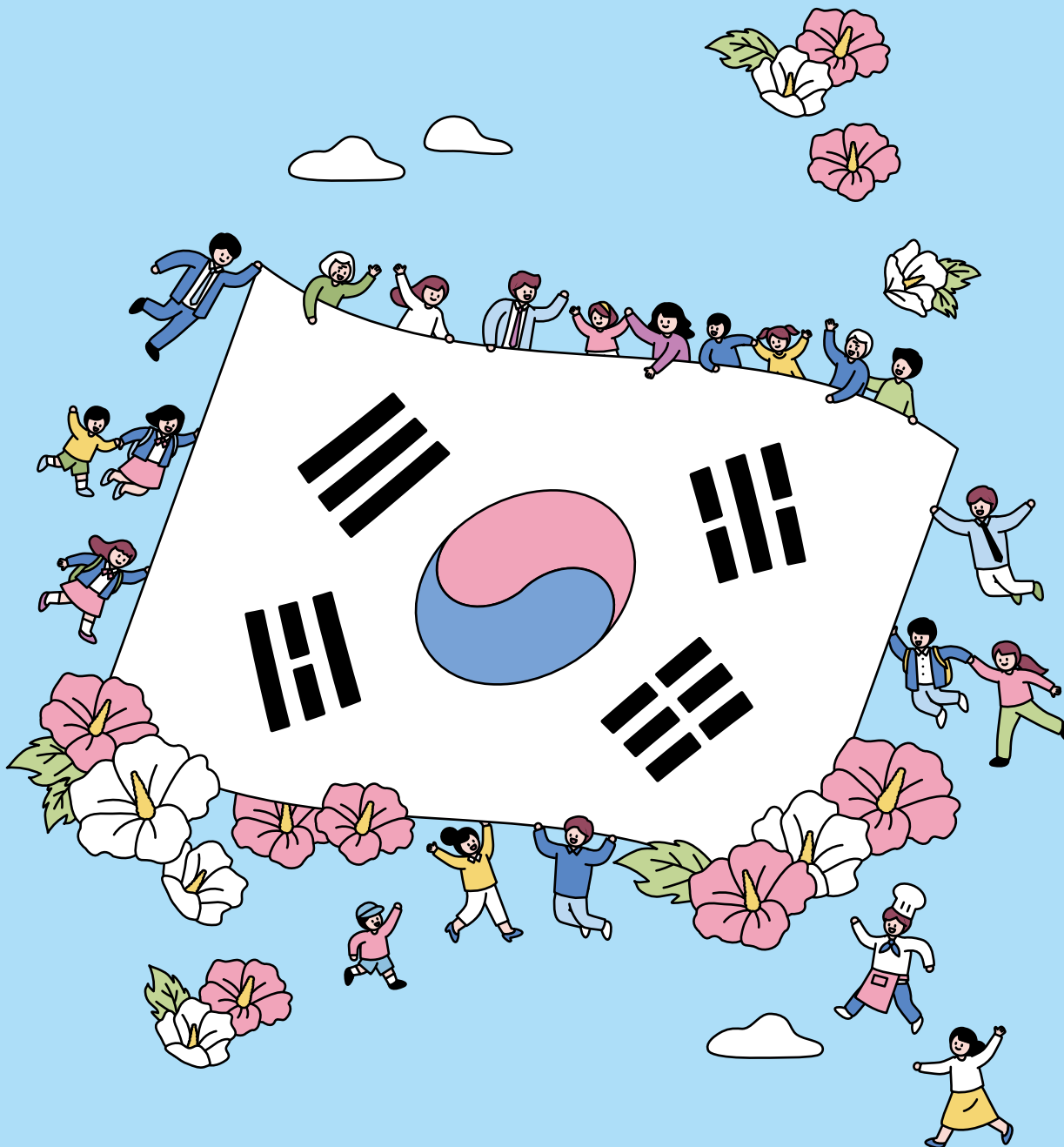


N. 민주사회

☑ 20대 핵심 추진 과제

16. 정치개혁

17. 사법개혁



16. 정치개혁



- ☑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 끝내겠습니다.
- ☑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.
- ☑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,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.
- ☑ 특권 대신 일하는 국회,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.
- ☑ 미래를 이끄는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.
- ☑ 대전환 핵심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.
- ☑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, 직무감찰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.
- ☑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.
- ☑ 국민이 만족하는 공무원조직을 만들겠습니다.
- ☑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.
- ☑ 진실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.

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 끝내겠습니다.

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추진

- 대통령 임기 4년의 중임제 도입
- 여·야 합의를 통해 개헌시 재임하는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단축하고, 중임제도 적용 배제

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헌법에 명문화

■ 청와대 기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선

- 비전 제시와 민의 수렴, 공약 이행과 이를 위한 당정과의 정책조정 기능에 집중
- 유능한 인재풀 확보 및 철저한 인사검증
- 제2부속실을 투명하게 운영하며, 대통령 배우자의 국민 통합과 국제 외교활동 지원

■ 국무회의의 심의기능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 활성화

-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행정부 운영

■ 책임총리제 실질적 운영 추진

-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
-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 실질적 보장
-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의 자율성 존중

■ 진영·출신지역·학벌을 넘어서 능력과 실력 중심으로 통합정부 국민내각 구성

■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하는 '국민통합추진위원회' 구성

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
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.

- 비례대표 확대
- 비례대표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
- 기초의회의 2인 선거구 제한
 - 득표수에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 추진

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,
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.

- 국회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
 -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여 국회 국정감사 기능 강화
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추진
-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여·야·정 협의체 상설화 추진

특권 대신 일하는 국회,
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.

-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심사 신속처리
 - 윤리심사 안건처리 시한을 단계별로 법정화
-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및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
 -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
 - 국회법이 정한 회의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, 구속 등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회 의원 수당 등 삭감
- 국민도 보다 쉽게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
 - 입법청원 요건 완화 및 상임위 심사 지원 조직 신설 추진

미래를 이끄는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.

- 각급 선거 최초 출마 만 34세 이하 청년후보자의 기탁금 폐지 등 청년 후보자들의 도전 장벽 제거 추진
- 청년 후보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조정
 - 청년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선거비용 전액 보전
 -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
- 정당의 청년 후보자 추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년추천보조금제 도입
- 성별·지역을 고려한 청년 공천 의무비율제 도입
-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 담당 수석비서관·청년 특임장관 신설
- 각 부처 청년예산에 실질적인 '총액배분 자율편성' 보장, 국민참여예산에 청년참여예산 쿼터제 적용,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 기능 강화
- 청년 참여단 개편으로 '청년의회' 상설화

대전환 핵심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.

-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전환 핵심 의제 논의 추진
-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의 결정 실질화 제고

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, 직무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.

- 감사원장·감사위원은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복수 추천되도록 선임절차 개선
- 직무감찰의 실효성은 제고하면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
 - 뇌물·품위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강화하되, 그 이외에는 직무감찰은 원칙적으로 회계부정 시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
-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거나 누락됐던 검찰청·기초지방정부·재외공관 등 사각지대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심사를 확대
- 감사 상대방의 변호인 조력권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원보장을 강화하는 등 권익보호 장치 보완

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.

-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,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 요건 도입 등 제도 개선
- 중앙정부 국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
-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

국민이 만족하는 공무원조직을 만들겠습니다.

- 공무원 전문직 및 개방형 임용제 확대, 중앙과 지방의 우수인력 교류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
- 성과보상 개편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알맞은 확실한 상벌체계 마련

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
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.

-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강화
 -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 조직·운영을 규정하는 근거 마련
 - 지방의회의 입법·예산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무처 인력 확충
-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
 - 지방의회 책임성·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감사 및 주민옴부즈만 도입
 - 주민참여예산 심사 확대 및 조례 제·개정 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 보장
 - 주민참여예산 심사에 사회적 약자 및 지역·성·연령별 다양한 계층 참여
 - 지방의회위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요건 완화 및 간소화 방안 마련

진실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.

- 과거사 발굴과 조사, 지원방안마련, 희생자 명예회복을 강구할 수 있도록
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능 강화

17. 사법개혁



- ☑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,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겠습니다.
- ☑ 국민 중심의 재판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.
- ☑ 수요자 중심의 '원스탑 법률조력'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.
- ☑ 국민을 섬기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도록 하겠습니다.
- ☑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겠습니다.
- ☑ 전문 법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- ☑ 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.
- ☑ 벌금·몰수·추징금의 공정성을 높ی겠습니다.
- ☑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을 강화하여 경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.

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,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생명권·안전권·주거권·건강권, 자기결정권, 알권리 등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기본권을 헌법에 명문화
-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추진
 - 국가인권정책의 추진체계를 국무총리가 총괄하도록 제도화하고 국가의 인권 보호와 증진 의무 강화
- 헌법재판관(총 9인) 구성방식을 변경
 -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 지명(3인)을 폐지하고, 6인을 국회에서 선출
 - 법관이 아니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의 다양화 추진

국민 중심의 재판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.

-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'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' 실질화
 - 법관을 임기말까지 대폭 증원하고, 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 선발을 확대하여 모든 1심 재판부에 배치
 - 형사재판에서 자백사건 이외에도 양형만 다투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간이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신속성 확보
-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사법 편의성 강화
 - 형사소송 등 모든 재판을 조속히 전자화하고 법원-기관간 전자정보시스템 도입
 - 소액사건의 판결이유 기재 의무화
 - 판결서 공개 의무화 및 임의어 검색 기능 보강 등 개선
 - 재판과정에 대한 녹음·영상녹화 의무화 및 원격영상재판도 활성화
-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인지대 등 소송비용 경감방안 마련

수요자 중심의 '원스탑 법률조력'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

-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대국민 법률지원 서비스를 연계·통합하고 서민들에 대한 소송구조를 강화
-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
- 국선변호 서비스 개선
 - 국선변호 서비스의 세부내용을 사건 유형 등에 따라 표준화하고 이용자 평가 강화
 - 국선변호인의 처우 개선 추진

국민을 섬기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도록 하겠습니다.

- 민주적인 사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개편 추진
-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
 - 대법관 증원 등 상고제도 개혁
 - 비판사 출신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추진
 -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의 변론 공개를 확대하고 공개변론은 중계 의무화
-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법원에 대한 국민평가제도를 도입
- 법관·검사의 직권남용 등 업무 책임성 강화 추진
-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, 고위공직을 퇴임한 변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적정 수임료 기준 설정 검토

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겠습니다.

■ 형사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개선

-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: 판사가 피고인인 경우 국민참여재판 의무 실시
- 배심원 자격 확대 : 만20세 → 민법상 성인인 만19세
- 판사가 임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없도록 요건 및 기준 보완

■ 형사사건 이외의 재판(징벌적 손해배상, 집단소송)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 적용 추진

■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한편,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 위해 인적·물적 지원을 확대

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무죄 판결 시 검사 측 항소 제한

전문 법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
■ 노동관련 분쟁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노동법원을 설치

- 노동관련 민사 및 행정사건 등은 노동법원이 1심으로 재판
- 노동사건의 심리에 노동전문가 참여방안 마련
- 노동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절차적 특례 마련

■ 해사사건 및 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 도입 검토

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.

-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을 제정
- 수사·기소권을 분리,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
- 검사의 기소·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
 -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설치, 보완수사 명령제 및 공소유지 전담변호사 도입
 -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실질화
 - 시민 감시·참여 제도의 실질화
-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·물적 역량 보강
- 검찰·공수처에 대한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고, 외부평가를 반영하며,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 제고
- 검사에 대해서도 법조일원화를 확대하여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 선발

벌금·몰수·추징금의 공정성을 높ی겠습니다.

- 자산·소득 등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·범칙금을 부과하는 벌금·범칙금 체계 도입 검토
- 약식절차에도 벌금형 집행유예제도를 도입
- 몰수·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등을 강화
- 독립몰수제 도입
 - 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시 부가형으로만 선고가 가능한 몰수제도를 개선하여 범죄수의 환수의 실효성을 제고

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을 강화하여 경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.

■ 국가경찰위원회를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구로서의 권한과 역할 강화

-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경로 다변화
- 경찰조직 내 비위 등에 대한 감사청구권 및 징계요구권 신설
-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 해임건의권 부여

■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'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' 구성

- 경찰청장 추천시 경찰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- 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,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추진

■ 자치경찰제 강화

- 시·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에 다양한 직역 전문가 참여 확대
- 자치경찰에 유능한 인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및 인사 반영
- 신분과 사무가 일원화된 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을 세종시로 확대하고 점차 전국화 준비

■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및 인사·예산의 독립성 강화

